

## 시민활동가의 정치참여에 대한 유권자인식 영향요인 분석

한성민·이숙종

본 연구의 목적은 유권자들의 시민활동가의 정치참여 지지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시민활동가의 국회진입에 대한 유권자 인식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야당성향으로서 시민단체에 가입하였거나 가입할 의사가 있는 여성의 경우 시민활동가의 국회진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매우 높았다. 여당성향 혹은 중도성향이면서 평화적 시위에 참여했거나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경우도 긍정적 인식이 높았다. 반대로 여당성향 혹은 중도성향이면서 평화적 시위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경우 긍정적 인식은 절반정도에 그쳤다. 야당성향으로서 정당에 대해 매우 불만족 할 경우도 긍정적 인식이 낮게 나타났다. 시민활동가의 국회진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세웠던 가설 가운데서는 대통령신뢰로 측정된 정부신뢰는 유의미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고, 예상대로 정치참여가 활발할수록 시민활동가의 국회진입을 지지했다. 반면에 가설과는 달리 국회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시민활동가의 국회진입을 지지했다. 시민활동가의 국회진출은 시민사회가 국회를 비판하는 대안세력으로 남기 보다는 이들과 협력하여 책무성과 대응성을 높여 제도권 정치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때 더 가능하다는 시사점을 얻게 한다.

[주제어: 시민활동가, 정치참여, 유권자인식, 영향요인, 국회]

### 1. 서론

한국의 시민사회는 1987년 민주화항쟁 이후 꾸준한 정치참여를 통해 권위주의 정권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적 정치세력으로 부상하였다. 이전까지 국가에 대한 저항을 그 본질로 삼았다면 이후 다양한 정치참여를 통해 정부나 지도자, 정당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게 된 것이다. 이는 정당들이 증가된 개방성에도 불구하고 민주화에 속도를 제대로 내지 못한 것과는 상대적으로 비교되는 결과로서 시민활동가들은 비선거적 정치참여는 물론 선거적 정치참여를 통해 국회에 까지 진입하게 되었다(이영제, 2006:249). 시민활동가의 국회진입은 점차 증가하여 시민사회의 영향력이 최고에 달했던 2004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최고치를 나타내었다. 이후 급

격한 하락세를 보이다 시민정치가 주요 화두로 작용한 지난 2012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다시 소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sup>1)</sup>. 그런데 이처럼 시민사회의 활발한 정치참여와 함께 시민활동가의 국회진입이 꾸준히 이어지고는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민사회 내부의 시각은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으로 크게 엇갈린다.

이들의 국회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시민활동가들은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신선한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치개혁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김광식, 1999; 강원택, 2002). 반면 반대 시각에서는 이들이 국회에 진출함으로써 시민운동의 정체성이 훼손될 수 있으며 전문가들이 시민활동 경력을 정계진출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는 시민사회의 존립을 흔들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도 지적되고 있다(김광식, 1999). 그렇다면 이와 같이 시민사회 내부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이들을 당선시킨 유권자들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과연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을까?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유권자들의 시민활동가의 정치참여에 대한 인식과 그 영향요인의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2년 국회의원총선거 당시 사회과학데이터센터에서 실시한 유권자의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유권자인식 영향요인들을 찾아내었다. 분석을 위해 교호관계를 밝힐 수 없는 모수적 통계분석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비모수적 통계분석 기법인 의사결정나무 분석과 모수적 통계분석 기법인 회귀분석을 모두 활용하였다. 그 결과 변수들 간의 교호관계는 물론 개별변수들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밝힐 수 있었으며 궁극적으로 시민활동가의 정치참여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II. 연구배경

### 1. 시민단체 및 시민활동가의 정치참여

한국사회에서 시민단체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정착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정치참여와 개혁을 통해 사회구성원의 신뢰를 바탕으로 급속히 성장해 정부 및 시장실패의 대안으로 정치과정에서의 중요한 행위자가 되었다. 정당은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시민들의 정치결사체로서 후보자 공천을 통해 시민과 정부사이의 소통의 매개역할을 수행한다. 그런데 대의민주주의가 시민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

1) 「프레스리안」, “박원순계? 19대 ‘시민정치’는 왜 실패했나?”. 2016.05.26.

지 못하고 민의가 왜곡되면 시민들이 직접 정치현장에 뛰어들게 된다(김영래, 2008: 114-118). 대의민주주의 하에서는 주인인 시민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어 처벌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데 선거기간이 아니더라도 시민사회의 조직적 행동을 통하면 아래로부터 그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임혁백, 2006: 47-50). 정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그 대안적 조직들이 나타나는 것은 이미 서유럽을 통해 확인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부터 서서히 시민사회의 정치참여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장훈, 2003: 113). 우리나라 시민단체의 정치참여 현황을 개념 및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시민단체의 정치참여

우리나라 시민단체의 정치참여는 1987년 민주화항쟁을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다. 1987년 민주화항쟁을 기점으로 사회운동의 성향과 주체는 학생과 재야 지식인들이 주도하던 권위주의 정부에 저항하는 반정부적인 세력에서 계급적 중립성을 내세우는 개혁적 시민운동 세력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이정진, 2007: 81). 1987년 민주화항쟁 이전이 해방정국과 한국전쟁 등 험난했던 역사적 경험을 내면화 하는 우리나라 시민단체의 성장과정이었다면 민주화항쟁을 거쳐 비로소 우리나라의 시민단체는 정치적 행위자로서 자기변형을 이루게 된다(홍성태, 2007:322). 시민사회의 정치참여는 1990년대를 기점으로 시민사회의 양적인 성장과 함께 본격화되기 시작했는데 시민단체의 63.6%가 이때 설립된 것이다<sup>2)</sup>. 시민사회의 정치참여는 2000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기점으로 다시 큰 변화를 겪는다. 2000년 국회의원 총선거 이전까지 시민단체의 정치참여는 비교적 소극적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는 상례적인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상례적인 정치참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시민단체의 정치참여가 사회변혁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제도개혁에 앞서 기득권을 가진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인들의 퇴출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2000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맞아 낙천·낙선운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되었다(김영래, 2004:119-120). 이러한 현상은 시민사회의 정당과 정치인들에 대한 기대의 불만족에서 오는 시민사회와 의회 혹은 정당사이의 긴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시민사회의 정치참여를 유형화 하면 <표 1>과 같이 갈등사례, 견제사례, 협력사례, 경쟁사례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이현출, 2004:6).

2) 시민의 신문사(2004), 『한국시민사회운동 15년사』, p.42.

〈표 1〉 시민단체 정치참여 유형

갈등사례	견제사례	협력사례	경쟁사례
총선시민연대 낙선낙천운동	의정평가/ 대선연대 대선자금실사	정치개혁추진 범국민협의회 활동	공직 및 정치참여

출처: 이현출(2004), p.6.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총선네트워크가 펼친 국회의원 후보자 낙천·낙선 운동 등은 갈등사례로 들 수 있으며 유권자단체들의 공명선거 감시활동, 후보자 정책평가 등은 견제관계의 사례로 볼 수 있다. 2000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전후로 한 국회의원 후보자 낙천·낙선 운동은 국내외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것으로서 시민사회의 정치참여에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sup>3)</sup> 또한 1991년 지방선거에서 결성된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는 시민단체가 선거에 참여한 시초가 되며 2006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활발해진 후보자 정책평가 활동은 매니페스토운동의 전신으로 꼽힌다. 시민단체의 정치참여 협력사례로는 정치개혁추진 범국민협의회활동 등을 들 수 있다. 2003년 출범한 정치개혁추진 범국민협의회는 정치자금법, 선거법, 정당법, 국회법 등에 대한 제도개선 활동들을 펼쳤다. 그러나 국회나 정당을 위한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다(이정희, 2004:66). 시민단체의 정치참여 경쟁사례로는 지방선거 참여, 시민활동가 공직진출, 정치세력화 등을 들 수 있다. 2002년 지방선거 당시 시민단체가 정치세력화를 통해 시민후보의 당선활동을 도운 사례는 획기적 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sup>4)</sup>.

한편 정치참여 유형은 선거에 직접적인 관여 유무에 따라서 〈표 2〉와 같이 구분될 수 있다(이영제, 2006:252). 선거적 참여는 다시 정당결성 및 가입여부에 따라 정당적 참여와 비 정당적 참여로 분류된다.

그런데 시민사회에서 시민활동가들은 비정당/비선거적 정치참여가 아닌 정당적 정치참여를 통해 직접적으로 국회진입을 시도하기도 한다. 도덕성과 개혁성을 바탕으로 국회에 진입하여 정치권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대변하겠다는 것인데 시민운동의 정체성의 혼란, 기존 정치권으로의 동화와 같은 부정적 인식도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이정진(2007), pp.83-84.

4) 환경운동연합은 자체적 기준에 따라 50의 후보자를 선정하였으며, 30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지방자치연대는 160명의 '시민후보'를 출마시키고 선거운동에 참여했다(유재일, 2002: 55-58).

〈표 2〉 정치참여와 정치세력화

분류기준		방법		구분
선거적 참여	정당적 참여	정당결성		정치세력화
		집단	입당 (연합 또는 연대)	
	개인	입당		
	비정당적 참여	후원, 지지표명 등 공명선거, 정책선거 캠페인 등		정치참여
비선거적 참여		시민단체 결성 및 참여, 시위, 서명운동, 청원 민원 등		

출처: 이영제(2006), p.252.

## 2) 시민활동가 국회진출 현황

시민활동가의 정치참여 중 가장 직접적인 것은 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지방의회로 진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국회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시민단체 출신 국회의원 현황을 살펴보면 1996년 15대 국회의원 총선거부터 그 비중이 계속 상승하여 시민단체의 낙천운동으로 사회적 영향력이 극대화 되었던 2000년 16대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2004년 17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후 급격히 감소하였다가 시민정치가 주요 화두로 작용한 2012년 19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맞아 다시 상승하였다. 시민활동가는 일반적으로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 상근자로 볼 수 있는데 단체의 대표 및 운영위원 등도 시민활동가의 범주에 포함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준에서 단순회원이나 자원봉사자를 제외한 시민단체 출신 국회의원의 현황을 국회의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리한 결과 15대 국회의 경우 시민단체 출신의 국회의원은 59명으로 전체의 17.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출신 국회의원의 숫자와 비율은 16대와 17대 국회로 갈수록 더 증가하였는데 16대 국회의 경우 시민단체 출신 국회의원은 78명으로 전체의 24.9%를 차지했고 17대 국회에서는 무려 115명인 38%로 나타났다(선우숙, 2005:34). 이후 18대 국회에 들어서서는 그 숫자와 비율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8대 국회의 경우 19명인 6.5%<sup>5)</sup>, 19대 국회는 24명인 8%<sup>6)</sup>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비율은 다른 직업군에 비해 높은 것은 아니다. 직업별로 분석한 결과 국회의원들은 법조, 교수, 행정, 정

5) 「한국일보」, “18대 국회의원 전직…한나라-檢출신11%, 민주-운동가 14%”, 2009.11.02.

6) 전용주, (2012:56).

당인 출신에 집중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sup>7)</sup> 이에 비하면 시민단체 출신의 국회의원 비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 시민사회를 대표하여 더 많은 시민활동가들이 국회에 진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표 3〉 시민단체 출신 국회의원 현황

	15대 (1996년)	16대 (2000년)	17대 (2004년)	18대 (2008년)	19대 (2012년)
당선자 수	59명	78명	115명	19명	24명
비율	17.6%	24.9%	38%	6.5%	8%

한편 SBS 데이터저널리듬팀의 전수분석 결과 시민단체 출신 국회의원 현황은 정당에 따라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sup>8)</sup>. 민주당 계열(민주통합당, 통합민주당, 열린우리당, 새천년민주당, 새정치국민회의, 민주당)이 32명인 것에 반해 새누리당 계열(새누리당, 한나라당, 신한국당, 민주자유당)은 8명에 불과했다. 정당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살펴보면 민주당 계열이 13.6%, 새누리당 계열이 3%로 약 4배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민주당 계열이 김대중-노무현 정권교체 이후 정치인재풀을 늘리면서 재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시민활동가들을 대거 영입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시민사회계는 전통적으로 진보적 이념과 친밀한 경향을 보여 왔고 새누리당 계열의 경우 오랜 기간 집권당이었던 것도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시민단체 출신 국회의원들은 그 비율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있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 의정활동평가<sup>9)</sup>를 바탕으로 한 선우숙(2005)의 분석에 따르면 15대 국회는 과학기술, 문화관광, 법제사법 16대 국회는 농림, 문화관광, 산업자원, 통일외교 17대 국회는 과학기술, 농림, 문화관광, 법제사법, 재정경제, 환경노동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5대 국회는 정무, 환경노동, 보건복지 16대 국회는 환경노동, 보건복지, 교육 17대 국회는 교육, 건설교통, 보건복지 위원회에서 뛰어난 의정활동 성적을 보였다. 한편 시민단체 출신 국회의원들은 국회 내에 연구단체도 두고 있다. 19대 국회에 들어서 시민단체 출신 국회의원들은 시민정치포럼

7) 「한국일보」, “국회의원 5대 직업에 편중”, 2009.11.02.

8) 1948년 제헌국회 부터 2012년 19대 국회의원 총 선거에서 당선된 지역구 의원 중 재선 이상 중복값을 제외한 2,119명(재보궐 비례대표 제외)을 전수 분석한 결과이다.

9) 정성평가(출석횟수, 법안발의 수, 일괄질의, 일문일답, 보고횟수, 자료조사요구건수) 300점 과 정량평가(정책대안능력, 국정심의능력, 이슈제기능력, 개혁성) 400점, 총 700점 만점.

을 창립하였으며 국회에 연구단체로 등록 시켰다. 시민정치포럼은 시민단체의 개혁적 요구를 정치권에 전달하는 등 시민단체와 국회의 가교역할을 하겠다는 것을 취지로 다양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회 운영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은 물론 시민단체가 제기한 주요 입법 과제들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4년 연속 우수의원 연구단체에 선정되었다. 시민정치포럼은 시민단체 출신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매우 좋은 사례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급진개혁성향의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도 함께 존재하고 있다<sup>10)</sup>.

## 2. 시민활동가 국회진입에 대한 인식과 영향요인

### 1) 시민활동가 국회진입에 대한 인식

시민활동가의 정치참여에 대한 인식은 시민사회 내부에서도 엇갈린다.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시민사회와 정부와의 관계가 협력적으로 변하면서 많은 시민활동가들이 청와대와 행정부, 집권정당의 요직에 합류하게 되는데 논란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sup>11)</sup>. 김영래(2004)에 따르면 시민사회의 정치참여는 정부와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거나 시민사회가 과도하게 오염되고 자율성과 중립성이 훼손되어 정부에 대한 감시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에서는 부정적이다. 개인적 수준에서 시민활동가의 정치참여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로 도덕성과 개혁성을 갖춘 인물의 정치진출, 정경유착 관계인 정치권에 새로운 방향제시, 다양한 시민들의 욕구대변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으나 시민운동의 정체성의 혼란, 기존 정치권으로의 동화, 시민사회 인재의 고갈, 시민활동의 도구화 등에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시민활동가의 정치참여에 대한 논의를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나누어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선우숙, 2005:20-26).

10) 「주간경향」 985호, “새정치 갈망하는 시민단체 해결사 떴다”, 2012.07.17.

11) 경실련의 정성철 상임집행위원회 원장, 정태윤 정책실장, 박세일 정책위원회 위원장, 이영희 상임집행위원회 위원장, 신대균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운영위원장 등이 청와대, 집권정당, 행정부의 요직에 합류했다(박상필, 2001; 박상필, 2012:172).

〈표 4〉 시민활동가의 국회진입에 대한 인식

시민활동가의 국회진입	
긍정적 인식	1. 개혁성과 도덕성으로 정치개혁의 초석이 됨 2. 부패와 불신의 기존정치권에 새방향 제시 3. 전문성을 갖춘 엘리트의 총원 4.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대변
부정적 인식	1. 시민운동의 정체성의 문제 2. 시민단체의 윤리성이나 독립성에 영향 3. 기존 정치체제로의 동화 4. 시민사회의 전력손실 및 분열

## 2) 시민활동가 국회진입 인식에 대한 영향요인

시민활동가 국회진입 인식에 대한 영향요인에 대해서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시민활동가의 정치참여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 다음 세 가지 가설의 설정을 통해 정치참여, 정부신뢰, 정치만족도를 영향요인으로 선정하였다.

가설1. 정치참여를 많이 하는 유권자일수록 시민활동가의 국회진입을 지지할 가능성이 크다.

기본적으로 정치참여를 많이 하는 유권자들은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정당과의 접촉빈도 역시 많은 편이다(김영태, 2012:63). 유권자들의 정치참여 동인으로는 정치효능감을 꼽을 수 있다(정한울·이근수, 2005:212). 유권자들은 정치효능감의 충족을 위해 시민사회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시민활동가들의 국회진입을 지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가설2.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유권자일수록 시민활동가의 국회진입을 지지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신뢰는 유권자의 정치참여 활동에 영향을 준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정당 활동이나 집회 및 사회참여 경험의 가능성은 낮아지는데 이는 정부신뢰의 수준이 낮을수록 정당 활동과 집회 및 사회참여에 적극적임을 의미한다(이숙종·유희정, 2010:306).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의 영향으로 시민들은 정치지도자들에게 사

회문제 해결을 위임하는 것보다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통한 해결을 시도하게 되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유권자들이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시민활동가의 국회진입을 지지할 가능성은 클 것이다. 시민사회는 정부에 정책 제안이나 감시활동을 통해 정부에 참여할 수 있지만 행정기관에 참여는 공무원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적 경로를 통하지 않고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한편, 국회는 그야말로 유권자를 대표하는 의원들을 직접 선출하는 활동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므로 입법부 활동에 참여가 보다 직접적일 수 있다. 더욱이 정부권력이 과도하다고 인식될 경우 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의 위상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유권자일수록 국회에 대한 기대가 커질 것이며, 시민을 보다 잘 대표할 수 있는 시민활동가를 국회에 진출시키고자 할 것이다.

가설3. 국회에 대한 불만이 큰 유권자일수록 시민활동가의 국회진입을 지지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 인식은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원활한 국가운영을 위해 중요하다. 국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국가권력이 가진 정통성을 약화시켜 국회가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독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조진만·임성학, 2008; 이근수·정한울, 2013; 정수현 2016). 이러한 국회 불신은 종종 '직업적' 국회 의원이 엘리트화 되어 유권자의 문제나 선호를 제대로 대변하고 있지 못하다는 불만에 기초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이들 엘리트 의원보다는 시민들 가까이에서 활동해 온 시민활동가들이 시민들의 고충을 더 잘 알고 자신들을 대변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따라서 국회에 대한 불만이 큰 유권자일수록 직접적인 민의의 전달을 위해 시민의 대표자로서 시민활동가의 국회진입을 지지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 Ⅲ. 연구설계 및 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목적은 유권자들의 시민활동가의 정치참여 지지에 대한 영향요인을 살펴보는 것으로서 실증분석을 위해 2012년 4월 사회과학데이터센터 조사연구팀이 전국에 거주하는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9대 총선 유권자의식 조사'를 활용하였다. 설문응답률은 100%로 설문응답자의 일반적인 배경은 <표 5>과 같다.

〈표 5〉 설문응답자의 일반적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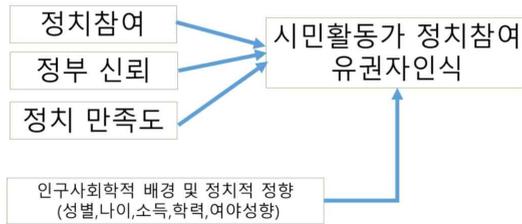
변수	구분	빈도(명)	비율(%)	변수	구분	빈도(명)	비율(%)
연령	19세/20대	187	18.7	월 소득	200만원 미만	214	21.4
	30대	207	20.7		200~350만원 미만	352	35.2
	40대	223	22.3		350~500만원 미만	160	16.0
	50대	188	18.8		500만원 이상	123	12.3
	60대 이상	195	19.5		모름/무응답	151	15.1
무학/중졸 이하					136	13.6	성별
학력	고등학교 중퇴 및 졸업	314	31.4	여성	504	50.4	
	전문대학 재학, 중퇴, 졸업	94	9.4	정치성향	여당지지	307	30.7
					중도	310	31.0
	대학교 재학, 중퇴, 졸업	393	39.3		야당지지	271	27.1
					모름/무응답	112	11.2
	대학원 재학 이상	45	4.5		합계	1000	100%
모름/무응답	18	1.8					

#### 2.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유권자의 '정치참여', '정부신뢰', '정치만족도'가 시민활동가의 정치참여에 대한 지지에 미치는 영향의 검증을 시도 한다. 시민활동가의 정치참여는 다양한 정치참여 유형 중 개인이 선거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선거적 정치참여'로 본다. 시민활동가의 정치참여에 대한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으나 앞서의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들을 통해 유권자들의 시민단체 인물들이 국회의원 후보로 출

마한 것에 대한 생각을 종속변수로, ‘정치참여’, ‘정부신뢰’, ‘정치만족도’ 세 가지 측면을 독립변수들로 선정했다. 정치참여는 단순한 투표참여와 같은 소극적 참여가 아닌 보다 직접적인 의사표현인 적극적 참여로 정의하였다. 정부신뢰는 Easton의 고전적 제안에 따른 “국민을 위한 정부의 활동에 대한 평가적 정향 혹은 긍정적 태도”로 정의 했다(Easton, 1965; Heatherington, 1998; Miller, 1974; Newton, 1999; 이민호·정용덕, 2013:19에서 재인용). 정부에 대한 신뢰의 대상에 대해서는 ‘정부체제’로 볼 것인지 ‘집권정부’로 볼 것인지에 두 논쟁 속에서 김병규·이곤수(2009: 895-896)와 같이 ‘집권정부’에 대한 것으로 보았다. 박희봉 외(2003)의 연구처럼 정부신뢰를 더욱 구체적으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3개 기관에 대한 신뢰로 구분할 수도 있지만 서형준·명승환(2015)의 국민들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단일하게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별도의 기관별 구분은 두지 않았다. 정치만족도는 국회의원의 지역구 및 의정활동과, 정당, 입법부 및 민주정치에 대한 만족도로 정의하였다. 통제변수에는 성별, 나이, 월 가구소득, 학력 등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배경과 여야성향과 같은 정치적 정향이 포함되었으며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모형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 3. 변수측정 도구

독립변수인 정부신뢰와 정치참여, 정치만족도는 개념적 요소이기 때문에 관찰변수로서 측정에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조작적 정의와 측정지표를 토대로 <표 6>와 같이 측정지표를 구성하였다.

〈표 6〉 독립변수 측정도구

변수	조작적 정의	측정항목
정치참여	보다 직접적인 정치의사 표현	- 청원서 서명 - 사회운동 참여 - 합법적 시위 참여 - 비공식적 파업 참여 - 빌딩이나 공장 점거 - 정당이나 시민단체 가입
정부신뢰	집권정부에 대한 평가적 정향	-이명박 대통령 업무수행 평가
정치만족	국회의원에 대한 만족 정치기관 및 민주정치에 대한 만족	- 국회의원 의정활동, 지역구 활동 만족도 - 정당, 입법부(국회)에 대한 만족도 - 민주정치 만족도

정치참여의 경우 청원서 서명, 사회운동 참여, 합법적 시위 참여, 비공식적 파업 참여, 빌딩이나 공장점거, 정당이나 시민단체 가입 6가지 문항에 대해 “참여하고 있다” “참여 할 수 있다”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3점 척도를 활용하였다. 정부신뢰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 업무수행에 대해 “매우만족”, “다소만족”, “별로만족 못함”, “전혀 만족못함” 4점 척도를 활용하였다. 정치만족도 정부신뢰와 마찬가지로 민주정치, 국회의원 의정활동, 국회의원 지역구 활동, 정당, 입법부에 대한 만족도를 “매우만족”, “다소만족”, “별로만족 못함”, “전혀 만족못함” 4점 척도를 활용하였다. 한편 종속변수인 시민활동가의 제도권정치 참여에 대한 인식은 “다수의 시민단체 인물들이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인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와 “다소 바람직한 현상이다”를 “바람직 함” 으로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다”와 “전혀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다”를 “바람직하지 않음” 으로 이분화 하였다.

#### IV. 분석결과

본 연구는 시민활동가의 제도권 정치참여에 대한 유권자인식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2012년 실시된 사회과학데이터센터의 ‘19대 총선 유권자인식’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기술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의사결정나무 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는 IBM사의 통계분석 프로그램인 SPSS 20이 사용되었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기술통계 분석 결과

〈표 7〉은 변수별 측정항목에 대한 기술분석값을 정리한 것이다. 먼저 정치참여 변수들을 살펴보면 정치참여 변수들 중에는 청원서 서명이 21.2%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이어 사회운동 참여 12.7%, 합법적 시위참여 11.1%, 정당 및 시민단체 가입 6.6%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공식적 파업참여나 빌딩이나 공장점거 참여의 경우 참여율은 각각 2.8%와 1.8%에 불과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향후 정치참여 의향에 대해서는 사회운동 참여에 대한 의향이 55.6%로 가장 높았고 합법적 시위참여가 55.5%, 청원서 서명이 51%로 그 뒤를 이었다. 비공식적 파업 참여에 대한 의향은 2.8%의 나타낸 저조한 참여율과 달리 35.4%라는 참여율과 비교 했을때 무려 12.6배나 높은 참여의사를 보였다. 실제 참여 경험은 없지만 잠재적인 참여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정당이나 시민단체 가입의 경우 47.2%가 절대 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청원서 서명과 사회운동 참여, 합법적 시위참여 같은 단수 정치참여 보다 적극성과 자발성을 요구하는 정당이나 시민단체 가입에 대한 거부감이 더욱 크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정부신뢰변수인 대통령 업무수행 평가에 대해서는 72.7%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특히 매우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도 30% 가까이 되었다. 정치만족과 관련해서는 민주정치에 대한 만족도가 45%정도로 가장 높았고 국회의 경우 20%가 채 안 되는 17.8%라는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정당의 경우도 18.6%로 국회의 경우와 별반 차이가 없었는데 만족도 면에서 유권자들은 정당과 국회(입법부)를 거의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 대해서는 22.5%와 26.1%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의회나 정당과 같은 기관에 대한 만족도 보다 국회의원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근소하기는 하지만 지역구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의정활동에 대한 만족보다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기술통계 결과 정치참여가 대체로 활발하게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며 정부신뢰와 정치만족도 또한 매우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최근의 정치불신 심화현상<sup>12)</sup>과 무관하지 않으며 50%가 넘는 참여의사를 실제 정치참여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정치신뢰의 제고를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

12) 「파이낸셜뉴스」, “당리당락에 국민은 없었다” - 정치불신 2년새 더 깊어졌다, 2016.1.14.

〈표 7〉 변수별 측정항목에 대한 기술분석

변수	측정항목	결과값				
		있다	할수있음	절대안할것임		
정치참여	청원서 서명	21.2%	51.0%	27.8%		
	사회운동 참여	12.7%	55.6%	31.7%		
	합법적 시위 참여	11.1%	55.5%	33.4%		
	비공식적 파업 참여	2.8%	35.4%	61.8%		
	빌딩이나 공장 점거	1.8%	16.4%	81.9%		
	정당이나 시민단체 가입	6.6%	46.3%	47.2%		
정부신뢰	이명박 대통령 업무수행 평가	매우잘함	잘함	못함	매우못함	
		2.4%	24.9%	42.8%	29.9%	
정치 만족	국회 의원	의정활동 만족도	매우만족	다소만족	만족않음	매우만족않음
			2.3%	20.2%	57.7%	19.8%
		지역구활동 만족도	매우만족	다소만족	만족않음	매우만족않음
			2.4%	23.7%	53.9%	20.0%
	정치 기관 및 민주 정치	정당만족도	매우만족	다소만족	만족않음	매우만족않음
			1.1%	17.5%	49.8%	31.6%
		국회만족도	매우만족	다소만족	만족않음	매우만족않음
			0.3%	17.5%	49.9%	32.2%
		민주정치 만족도	매우만족	다소만족	만족않음	매우만족않음
			1.8%	43.2%	46.7%	8.3%

## 2.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결과

의사결정나무 분석과 회귀분석에 앞서 구성개념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배리맥스 회전방법을 통한 탐색적 요인분석과 Cronbach's Alpha 테스트 등을 통한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표 8〉과 같이 요인적재치, Cronbach's Alpha, KMO, Bartlett 구형성 검정의 유사 카이제곱값과 유의확률에서 구성개념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3)</sup>.

13) 요인 간 상관정도를 나타내는 요인적재치는 0.5 이상, 요인의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Alpha값은 0.7 이상, 표본적합도를 나타내는 KMO는 0.6 이상을 유의적 수준으로 보았다. 대각행렬을 검정하는 Bartlett 구형성 검정의 p값은 0.05를 이하를 유의 확률로 보았다.

〈표 8〉 변수들의 요인분석 결과

변수	측정치표	요인적재치		Cronbach's Alpha	KMO	Bartlett 구형성 검정	
정치참여	청원서 서명	.740		.841	.826	1812.182 (p=0.000)	
	사회운동 참여	.827					
	합법적 시위 참여	.772					
	비공식적 파업 참여	.759					
	빌딩이나 공장 점거	.629					
	정당이나 시민단체 가입	.754					
정부신뢰	이명박 대통령 업무수행 평가	-		-	-	-	
정치만족	국회 의원	의정활동 만족도	.213	.907	.752	.648	1233.192 (p=0.000)
		지역구활동 만족도	.186	.912			
	정치 기관 및 민주 정치	정당만족도	.869	.159			
		국회만족도	.869	.126			
		민주정치 만족도	.526	.214			

### 3. 의사결정나무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변수 간 교호작용을 알 수 없는 등 모수적 방법이 갖는 여러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 회귀분석에 앞서 비모수적 방법인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실시하여 정부신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탐색적으로 분석 하였다. 의사결정나무 분석은 “의사결정규칙을 나무구조로 도표화하여 분류와 예측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목표변수와 입력변수들 사이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선별하여 해석하기 쉬운 나무구조를 만들어 내는 기법이다(강현철 외, 2015:82). 자료의 유형별 세분화 및 결과변인의 분류, 영향력 높은 변인을 예측변인들 사이에서 선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장점이 있다(송태민·송주영,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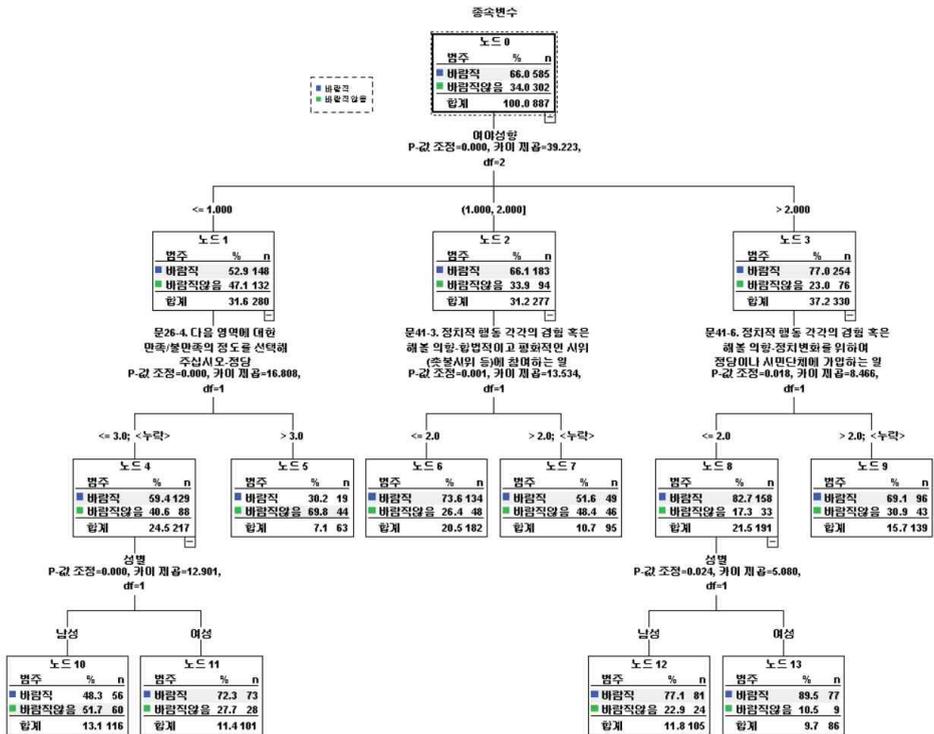
의사결정나무 분석에 사용된 확장방법은 CHAID 방식이며 분리규칙에 따른 확장한계 깊이는 4, 최소 케이스는 상위노드는 100, 하위노드는 50으로 두었다. 교차타당성 검토결과 추정값은 0.335, 표준오차는 0.016로 의사결정나무 모형의 분류정확성은 86%로 높게 나타났다. 의사결정나무 분석에 활용된 독립변수들은 III. 연구설계 및 방법의 〈표 5〉와 같고 분석결과는 〈그림2〉와 같다.

분석결과 시민활동가의 제도권 정치 참여인식은 여야성향, 정당에 대한 만족, 평화적 시위참여, 정당이나 시민단체 가입, 성별에 따라 분류됨을 알 수 있었다. 전체

적으로 66%가 시민활동가의 출마에 대해 바람직하다도 보고 있으며 34%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 긍정적 인식이 부정적 인식에 비해 2배 정도 크게 나타났다.

마디별로는 여당성향의 그룹은 시민활동가에 대해 52.9%만이 지지하는 반면 야당성향을 가진 그룹은 77.0%가 지지를 보여 여당성향에 비해 야당성향의 그룹의 지지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야당성향의 그룹 중 정당이나 시민단체에 가입하였거나 가입할 의사가 있는 경우 82.7%로 그 지지율이 더욱 올라갔으며 이중에서 여성인 경우 89.5%라는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반면 여당성향을 가진 그룹 중 정당에 대해 매우 불만족하는 경우는 지지율이 30.2%에 불과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정당에 대해 매우 불만족하지 않는 여성의 지지율은 72.3%로 남성에 비해 24%정도 높게 나타났다. 야당성향을 제외한 여당성향과 중도성향의 경우는 촛불시위와 같은 평화적 시위에 참여했거나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경우 73.6%로 지지율이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평화적 시위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경우는 지지율은 51.6%로 22%정도 하락하였다.

〈그림 2〉 의사결정나무 분석결과



#### 4. 회귀분석 결과

의사결정나무 분석에 이어 정부신뢰, 정치만족도, 정치참여 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이분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회귀모형은 유의성을 갖추었으며 <표 9>와 같이 독립변수들 중에서는 정당이나 시민단체가입과 국회만족도가, 통제변수들 중에서는 성별, 연령, 학력, 여야성향이 시민활동가의 정치참여에 대한 유권자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회귀분석 결과

모형	시민활동가의 국회진입에 대한 유권자 인식			
	B	S.E	Exp(B)	유의확률
<b>독립변수</b>				
청원서 서명	-.078	.207	.925	.707
사회운동 참여	-.074	.248	.929	.765
합법적 시위 참여	.087	.236	1.091	.713
비공식적 파업 참여	.169	.261	1.184	.517
발당이나 공장 점거	-.400	.281	.670	.154
정당이나 시민단체 가입	.573	.214	1.773	.008**
대통령 업무수행 만족	-.259	.159	.772	.104
민주정치 만족	-.099	.183	.906	.587
정당만족	.182	.205	1.200	.374
국회만족	.431	.210	1.539	.040**
국회의원 의정활동 만족	.140	.232	1.150	.547
국회의원 지역구활동 만족	-.113	.219	.893	.607
<b>통제변수</b>				
성별	-.811	.218	.444	.000***
연령	.360	.101	1.433	.000***
학력	.250	.111	1.285	.024**
월소득	.064	.114	1.066	.573
여야성향	-.545	.152	.250	.000***
상수	-1.900	1.224	.150	.121
Negelkerke R-제곱		.239		
Hosmer Lemeshow	카이제곱	9.805		
	자유도	8		
	유의확률	.279		

영향요인을 회귀계수 방향과 발생확률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정당이나 시민단체에 가입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가입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 보다 시민활동가의 정치참여에 대해 바람직하게 생각할 확률이 약 1.7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정당이나 시민단체에 가입을 통한 경험이 시민활동가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끌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국회에 대해 다소 만족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다소 만족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보다 시민활동가의 정치참여에 대해 바람직하게 생각할 확률이 약 1.5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시민활동가와 국회간의 협력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통제변수들 중에서는 월소득을 제외한 성별과 연령, 학력, 여야성향 등 인구통계학적 변수 및 정치적 정향 변수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변수 중에서는 여성일수록 시민활동가의 정치참여에 대해 바람직하게 생각할 확률이 높으며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치성향이 야당에 가까울 경우도 그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55.6%, 야당성향을 보일수록 75% 정도 확률이 더 높았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약 1.4배, 학력이 높을수록 약 1.28배 정도 확률이 낮았다.

#### IV. 결론

본 연구는 1987년 민주화항쟁 이후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민활동가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유권자인식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에서 시민활동가가 국회에 진출하게 된 역사는 짧은 편이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시민활동가들의 당선은 꾸준히 상승세를 타다 2004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잠시 주춤한 상태이지만 지난 2012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24명이 당선 되는 등 계속 이어지고 있다. 시민활동가들은 당선 이후 국회 안에 연구단체를 설립하고 의정 및 정책연구 활동을 활발히 펼치면서 비 시민단체 출신 의원들 보다 의정평가에서 앞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 내부의 시민활동가의 정치참여를 바라보는 시각이 기대와 우려로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연구가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시민단체의 정치참여는 선거에의 직접관여 여부에 따라 선거적 참여와 비선거적 참여로 나눌 수 있다. 본고에서는 선거적 참여 중에서도 시민활동가의 국회진입에 대한 유권자인식 영향요인들의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에는 사회과학테

이터센터의 2012년 국회의원 총선거 유권자의식 조사자료가 활용되었으며 변수 간 교호관계를 파악할 수 없는 모수적 통계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모수적 통계분석 기법인 회귀 분석과 더불어 비모수적 통계분석 기법인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함께 실시하였다.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통해 목표변수와 입력변수들 사이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도식화 된 나무구조를 통해 영향변수들을 쉽게 해석할 수 있었다. 분석결과 시민활동가의 정치참여에 대해서 유권자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권자들의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정당 및 시민단체 가입, 국회에 대한 만족도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야당성향으로서 시민단체에 가입하였거나 가입할 의사가 있는 여성의 경우 시민활동가의 정치참여에 대한 지지가 매우 높고 야당성향으로서 정당에 대해 매우 불만족 할 경우 지지가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여당성향 혹은 중도성향이면서 평화적 시위에 참여했거나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경우도 시민활동가의 정치참여에 대한 지지가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여당성향 혹은 중도성향이면서 평화적 시위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경우는 지지정도가 절반정도에 그쳤다.

회귀분석결과는 가설1과 같이 정당이나 시민단체에 가입하지 않을수록 시민활동가의 정치참여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설3과는 달리 국회에 대해 만족하지 않을수록 시민활동가의 정치참여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할 확률이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가설2에 대해서는 대통령신뢰로 측정된 정부신뢰에 대한 유의미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인구사회학적 배경 및 정치적 정향 중에서는 여성일수록, 정치성향이 야당에 가까울수록 시민활동가의 정치참여에 대해 바람직하게 생각할 확률이 높으며 연령과 학력이 높아질수록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시민사회 내부에서 시민활동가의 정치참여를 바라보는 시각이 기대와 우려로 엇갈리고는 있지만 시민활동가의 정치참여에 대한 유권자인식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었다. 이는 최근 시민단체 출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과 더불어 고무적인 일이다. 시민활동가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히 이를 반대하는 여당성향을 가진 정당에 대해 불만족하는 남성 유권자들을 집중적으로 배려해야 할 것이며 야당성향을 가진 정당이나 시민단체에 가입하였거나 가입할 의사가 있는 여성 유권자들을 실망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끝으로 시민사회는 국회를 비판하는 대안세력으로 남기 보다는 국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향상된 책무성과 대응성을 바탕으로 제도권 정치에 대한 만족도를 높인다면 시민활동가의 국회진출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강현철·강현철 외. (2015). 『데이터마이닝 방법론』. 파주:자유아카데미.
- 김광식. (1999). 『한국 NGO』. 서울:동명사.
- 김동춘 외 (2000). 『NGO란 무엇인가?』. 서울:아르케.
- 김병규·이곤수. (2009).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본 정부신뢰의 영향요인: 이명박정부에 대한 국민인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1(3): 893-914.
- 강원택. (2002). “NGO의 선거참여, 어떻게 볼 것인가”. 『선거와 NGO』. 한국NGO 포럼.
- 김영래·이정희 외. (2004). 『NGO와 한국정치』. 서울:아르케.
- 김영래. (2004). “한국 시민운동의 과제와 전망”. 김영래 외. 『NGO와 한국정치』. 서울:아르케.
- \_\_\_\_\_. (2005). “한국과 캐나다의 시민사회단체의 정치참여 비교 연구”. 『시민사회와 NGO』 3(11):119.
- \_\_\_\_\_. (2008). “대의민주정치의 위기와 시민정치의 성찰”. 『OUGHTOPIA』 23(2):114-118.
- 김영태. (2012). “정당의 정치적 동원과 투표참여:19대 총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21(3):63.
- 김옥. (2005). 『정치참여와 탈물질주의 한국과 스웨덴의비교』. 서울:집문당.
- 김행희. (2011). “시민단체의 당파성 제고방안”. 『민주주의와 인권』 11(3):163.
- 박병옥. (2000). “NGO와 정부간의 올바른 관계 정립방안”. 『정부와 NGO』. 한국행정학회 2000년도 기획세미나 발표논문집.
- 박상필. (2001). 『NGO와 현대사회』. 서울:아르케.
- \_\_\_\_\_. (2012). “1990년대 이후 한국 시민사회의 발전: 정부와 시민사회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기억과 전망』 27(0):172.
- 박희봉·이희창·조연상. (2003). “우리나라 정부신뢰 특성 및 영향 요인 분석”. 『한국행정학보』 37(3): 53.
- 서경석. (2000). “한국 시민운동의 현실과 미래적 전망”, 『정부와 NGO』. 한국행정학회 2000년도 기획세미나 발표논문집.
- 선우숙. (2005). “NGO 출신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형준·명승환. (2015). “사회자본과 정부신뢰의 관계 재조명”.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9(3):15.

- 송태민·송주영. (2015). 『빅데이터연구 한권으로 끝내기』. 서울:한나래아카데미.
- 시민의신문. (2004). 『한국시민사회운동 15년사』. 서울:시민의신문.
- 유재일. (2002). “한국 선거과정과 NGO의 역할”. 『지역학연구』 창간호: 55-58.
- 유팔무. (2004). 『한국의 시민사회와 새로운 진보』. 논형.
- 이근수·정한울. (2013). “국민신뢰의 영향요인 분석:국민인식조사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5(2): 359-380.
- 이민호·정용덕. (2013).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신뢰 증진방안 연구”.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 이숙중·유희정. (2010). “개인의 사회자본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치학회보』 44(4):06.
- 이승중. (1993). 『민주정치와 시민참여』. 서울:삼영.
- 이영제. (2006). “시민운동의 정치참여와 정당의 변화에 관한 연구”. 『시민사회와 NGO』 4(1):249-252.
- 이정진. (2007). “시민사회운동과 정당정치”. 『기억과 전망』 17호:81-84.
- 이정희. (2004). “한국의 정치개혁과 시민운동”. 김영래 외. 『NGO와 한국정치』. 서울:아르케.
- 이현출. (2004). “시민단체의 선거참여와 의정감시활동 방안”. 『대한정치학회보』 11(3):6.
- 임혁백. (2006). “시민사회, 정치사회, 민주적 책임성”. 『한일공동연구총서』.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45-92.
- 장훈. (2003). “정당의 위기와 대안적 조직의 등장:2000년 총선시민연대의 사례”. 『국제·지역연구』 12(3):113.
- 전용주. (2012). “19대 국회의원 특성:사회경제적 배경을 중심으로”. 『의정연구』 18(2):56.
- 정수복. (1996). 『참여민주주의를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과 정책과제』. 박영률출판사.
- \_\_\_\_\_. (2002). 『시민의식과 시민참여』. 서울:아르케.
- 정수현. (2016). “국회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정치적 요인에 관한 분석”. 『사회과학논총』 18집:55-70.
- 정한울·이근수. (2005). “정치효능감과 정치신뢰의 조합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의정연구』 19(1):212.
- 조진만·임성학. (2008). “한국 국회의 불신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요인 분석”. 『정치정부연구』 11(2):213-237.

한종수. (2001). 『현대정치학의 이해』. 동성사.

황성원. (2003). “시민단체의 정치 공직참여”. 『행정포커스』 2003(1): 58-60.

홍성태. (2007). “한국 시민사회의 정치과정과 성격변화-1990년대 이후 시민사회의 갈등적 제도화”. 『민주주의와 인권』 7(1):322.

「SBS NEWS」, “[마부작침] 새누리의 인재, 더민주의 인재”, 2016.03.15.

「주간경향」 985호, “새정치 갈망하는 시민단체 해결사 떴다”. 2012.07.17.

「파이낸셜뉴스」, “당리당략에 국민은 없었다” - 정치불신 2년새 더 깊어졌다, 2016.1.14.

「프레시안」, “국회로 간 시민운동가, ‘기대’와 ‘실망’은 종이 한장 차이”, 2012.05.24.

「프레시안」, “박원순계? 19대 ‘시민정치’는 왜 실패했나?”. 2016.05.26.

「한국일보」, “18대 국회의원 전직…한나라-檢출신11%, 민주-운동가 14%”, 2009.11.02.

「한국일보」, “국회의원 5대 직업에 편중”, 2009.11.02.

Easton, D. (1965). "A systems analysis of political life". New York: University of Chicago.

Heatherington, M. J. (1998). "The political relevance of political trust,"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 791-808.

Miller, A. H. (1974). "Political Issues and Trust in Government: 1964-1970,"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 68(3): 951-972.

Newton, K. (1999). "Social and Political Trust in Established Democracies," In Norris, Pippa(ed.) Critical Citizens: Global Support for Democratic Government.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169-187.

**한성민(韓成旻):**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행정학 석박사통합과정에 재학 중이다. (사)해위윤보선대통령 기념사업회에 재직하고 있으며 (사)한국청년유권자연맹 운영위원과 인천광역시 시민감사관, 통일부 통일교육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관심분야는 청년 및 사회정책, 사회자본, NGO, 민주시민교육, 빅데이터 분석 등이다. 주요논문으로는 “청년취업 결정요인에서 본 청년 취업대책 개선책 연구”(2016), “인천광역시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인천지역 대학생 인식조사”(2016), “민주화세대 투표행태의 지속과 변화”(2013)가 있다 (clon96@skku.edu).

**이숙중(李淑鍾):** 교신저자. 미국 Harvard University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국정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민주주의, 동아시아 거버넌스, 정치경제, 여론 연구 등이다. 최근 저서로는 “세계화와 제 2막”(2010, 동아시아연구원), “Public Diplomacy and Soft Power in East Asia”(2011, Palgrave Macmillan),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와 한국”(2012, 동아시아연구원)이 있으며 논문으로는 “정부에 대한 공정성 인식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정부성과 만족도의 매개효과에 대한 다중집단 분석을 중심으로”(2016), “한국사회 갈등의 원인 및 관리에 대한 연구: 갈등유형별 특성을 중심으로”(2016), “한국의 종교적 신앙 기반 NGO(FBO)에 관한 탐색적 연구: 종교 유형별 현황분석과 조직 유형화 논의를 중심으로”(2015) 등이 있다 (skjlee@skku.edu).